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박 치 경



요즘 광주·전남 교육계에 “밤새 안녕하셨어요?”라는 인사말이 뇌살아났다. 날만 새면 그동안 돌아있던 교육비리가 하나 둘씩 터져 나오는 바람에 마음 풀이며 서로 안부 쟁기느라 부산하다.

교육계의 크고 작은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촌지부터 시작해 교원인사를 놓고 오가는 금품과 향응은 ‘인사’라는 이름으로 아예 고질적 ‘문화’로 뿐만 내린 지 오래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여기에서 각종 교육기자재 체택료, 학교시설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리베이트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여서 불거지는 대로 사법처리됐다. 최근 광주에서는 학교 정수기 납품비리로 교육청 간부가 자살해 큰 파장이 일었다. 뛰어난 교육계 간부들이 학교 공사 수의계약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출소를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은 금명 간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의 비리는 일반 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많다. 시민 대부분이 학부모에서 교육계의 비위에 민감하고, 첨단교육을 지향하면서 학교시설과 기자재 관련 사업성도 높아져 부조리와 범법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환골탈태? 도루묵?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비리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자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를바 ‘진보교육감’ 출현 이후 내부고발 방침이 세워지면서 당시 국비를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가 닥친 것이다.

과거 비리가 터지면 가급적 적당한 선에서 감싸려 했던 게 솔직한 평가다. 언론에 보도되고 공론화된 큰 사건이야 사법 처리를 면할 수 없었지만, 적당히 넘겨도 될 비리를 굳이 깨발려서 서로 좋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에게 촌지를 받고 학교 공사를 분리 발주한 한 초등교장을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정에 비위가 드러난 고교 교장을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이 같은 자세는 우선 비리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 진보교육행정에 대한 일부의 반감을 줄이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만연한 교육계 비리구조에서 환골탈태하겠다는 진정성은 일단 수

우리 사회에 시범케이스라는 말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무슨 개혁의 이름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 비리를 엄중하게 다스렸다 금세 사그라지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다. 교육에 이 같은 정치논리를 곧장 대입하기는 어색하지만 광주·전남교육청의 단호한 비리 척결의지가 과거의 개혁놀음과 닮은 꽂이 꽈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비리 줄면 절반 성공

따라서 양 교육청의 최근 고발조치가 ‘태산명동서일궐’(泰山鳴動鼠一匹)이 된다면 또 하나의 입발팀 악속에 그칠 뿐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 측근인사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도 과감하게 메스를 댈 수 있어 보여주기 아니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높은 도덕성을 강조해 당선됐던 광주·전남 교육감들은 법조인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있거나 내부고발로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교육감들이 임기 미무리 시점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비리를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공약이 ‘도루묵’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온펜칼럼

심상돈



며칠 전 응급 환자에 대한 기사가 한 중앙지 1면에 보도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경기도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트럭을 정비하던 김모씨가 차량에 걸렸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병원에서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의료센터(1339)에 도움을 청했고, ‘아렌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살린 아주대 병원 이국종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외상으로 부상이 생긴지 3시간이 지난 뒤였다. 아주대 병원의 이교수는 서둘러 수술을 하였지만 ‘끌든아워’를 놓쳐 환자의 상태가 좋지

심히 수술했더니 병원 손해만 8억 원이 넘었다고 하였다.

그러니 병원도 의사도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증외상 센터가 독일에는 90곳, 미국에는 50곳, 일본에는 22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한군데도 없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으로 암(28.3%), 심뇌혈관질환(19.5%)에 이어 외상(9.1%)이 꼽힌다. 의료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전국 6개 권역에 외상센터를 설치하고 헬리콥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냈으나 한국개발원(KDI)에서는 비용대비경제성이 낮다는

응급 외상 진료체계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 응급 외상 진료 체계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외상 진료에는 이른바 ‘golden hour’가 있다. 사고 직후 1시간 내에 치료를 가르킨다. 이 사이에 치료하면 환자의 생명을 건질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권역별 전문외상 센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번 사고 환자도 일단 병원에서 거의 3시간 가량을 지체해야 했다. 또 응급환자 전용 헬기가 없어 소방헬기를 요청하고 환자를 옮기는데 추가로 50여분 가량이 버려졌다.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데 소방항공대에서는 “헬기를 끄우려면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막상 헬기는 기초 의료 장비도 없었고 무전기도 고장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첨단의료시대, OECD 국가 중의 표수준 5위인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61만여 명의 중증외상환자는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2만8천여 명이 사망했다. 이 중 33%인 9천여 명은 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것이 ‘예방 가능 사망률’로 숨진 외상 환자 세 명 중 한 명은 제대로 응급 외상 진료만 받았더라면 살았다는 얘기다.

선진국의 경우 ‘예방 가능 사망률’이 10% 이하다. 이를 낮추려면 응급이송체계는 물론 전문의와 전문병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외상전문 병원은 병원의 경영 측면에서 보면 빨점이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교수도 최근 인터뷰에서 작년까지 1년간 열

이견을 냈다고 한다. 어떻게 연간 1만 여명의 목숨을 구하는 사업을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의 의견을 내야 할 한국개발원의 의견은 당연한 것이며 보건의료관련이 아닌 경제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부서의 의견에 의해 보건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행정부에서 있다 잘못이다.

한 나라의 장기적인 보건정책을 수립과 시행이 경제적인 관점의 보고서 한 장 때문에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이 흔들리고 바뀌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응급의료 체계를 공공의료로 행하려 한다면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적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발생한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문제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발생 가능한 문제는 응급의료체계로 공공성을 강조하며 민간의료체계로 떠넘기려 한다면 신종 플루가 전 국가적으로 유행했을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의료행위 및 재료의 사용은 제대로 응급 외상 진료만 받았더라면 살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1년간의 응급 의료행위로 병원 손실이 8억 원을 넘었을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그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줄일 것이다. 응급 외상 진료체계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이미 늦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아병원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평상’을 수여 합니다. 은평상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음식점 물컵 자외선 살균 소독기 제대로 활용했으면

요즘 음식점에 가면 물컵을 소독해주는 자외선 살균기 흔하게 본다. 그런데 자외선으로 소독했으니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소독기 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살균 기계가 아니라 컵 보관용 싱크대로 전락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외선 살균 소독기 되려면 우선 컵에 물기가 최대한 없어야 한다. 만약 젖은 컵을 놔둘 경우 세균이 많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컵에 물기가 묻어 있으면 자외선 투과율이 저지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컵을 겹쳐 놓았느냐. 아니나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컵을 겹쳐 놓을 경우 물기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외선이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 안에 있는 컵은 살균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사용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살균 소독기가 아닌 물컵 보관함일 뿐이니 식당들이 제대로 활용하길 바란다.

▲윤현숙·순천시 인풍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시 설

과학벨트 ‘지반 안정성’ 제외 납득 안 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입지선정 방식이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 열리는 과학벨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종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거점지구’ 한 곳에 같이 둘다는 원칙을 확정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입지 평가에서 지반 및 재해 안전성 요소의 경우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중이

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의 입지 선정에 있어 지반 및 재해 안전성을 평가 항목에 제외로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종이온가속기 시설은 안전성이 필수 요소다. 만약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 종이온가속기가 파손될 경우 과학벨트사업 자체는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과학벨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 대계다. 이런 중장래한 국가사업이 처음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추진동력이 저지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물론 사업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항목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방사능 철새’ 호남 유입, 대책 서둘러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광주에서도 검출된 가운데,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철새에 의해 방사성 오염 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류 학자들에 따르면 철새들은 일반적으로 겨울나기를 위해 9~10월 사이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동남아로 이동하기 때문에 철새들의 정확한 이동경로와 방사성 오염 여부 및 감염 전파 가능성 등 각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피해 사례가 단 한례도 없었기 때문에 철새의 감염이나 철새에 의한 방사성 오염 물질 유입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서 격출된 상황이어서 철새에 의한 오염 물질 유입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철새 중에는 능이촌 인가 주변의 야산이나 갈대밭·덤불에서 생활하거나 음식

쓰레기를 뒤지는 등 사람 주변에서 생활하는 종류도 있어, 만일 철새로 인해 오염 물질이 유입된다면 2차 감염도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인식표를 부착한 철새들이 흑산도·홍도에서 발견되거나 홍도에서 부착한 철새가 일본에서 재발견되는 등 모두 6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조류학자들은 한국을 통과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철새들이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AI(조류 인플루엔자) 같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 물질을 피드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부 등 관계당국은 일본에서 날아오는 철새의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철새의 방사성 감염 및 전파 여부 등을 서둘러 파악해야 할 것이다. 철새에 의한 2차 감염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애써서 당하는 격이다.

無等鼓

일본 아이들이 철들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바로 차례, 순서를 뜻하는 ‘준반’이라고 한다. 남에게 폐(메이와쿠·迷惑)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라는 데, 일본인의 독특한 문화양식이자 초등학교 첫 수업에서 배우는 사회윤리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뇌리에 ‘메이와쿠가 켜우니’(迷惑을 풀어주는) 즉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관념이 형성된 것이라 고한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 사태를 처리해가면서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에 보여준 태도는 이 같은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다.

일본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서 한국과 중국에는 아예 알리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를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계에 “방사성 물질 오염”이라는 엄청난 폐를 끼친 것도 모자라,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 사실을 미국에 만 일린 채 다른 이웃 국가에는 숨겨버

린 것이다. 일본인은 왜 그토록 폐 끼치기를 삶아하는 것일까. 그것은 남을 위한 배려에서 아니라, 바로 자신을 ‘타인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번 사태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는 생각이다. 남에게 폐를 끼칠 경우 보복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주변국은 무시한 채 미국과만 협의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저절로 올랐던 웅정을 당했던 기억, 그리고 한때나마 주변국을 지배했던 추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강대국인 미국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 등에는 폐를 끼쳐도 보복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 지나친 생각일까.

지진의 참사 속에서도 ‘독도문제’를 놓고 또다시 한국에 짜증을 거는 일본의 태도가 ‘일본의 이중성’에 대한 심증을 굳혀주는 듯 하다.

/홍행기 경정부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1-20-2(우편번호 501-711)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전화 222-4918~4919	경영지원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면집 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경부 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